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9. 9.(화) 12:00
(지 면) 2025. 9. 10.(수) 조간

한-일 양국 지방행정 발전 위한 ‘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’ 개최

- 행정안전부 - 총무성, 양 기관 9월 9일(화)~10일(수), 일본 도쿄에서 합동세미나 개최
- ‘지방소멸 대응’, ‘지방재정 불균형 해소’, ‘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표준화’ 위한 상호 정책경험 공유 및 공동 해결방안 모색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9월 9일(화)부터 9월 10일(수)까지 김민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도쿄의 총무성을 방문해 ‘제25회 한·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*’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* 1991년 한·일 양국 정상 간 합의(노태우 대통령 - 가이후 총리)에 따라 시작되어, 매년 합동 세미나 형태로 양국 교대 개최하는 韓(행정안전부)-日(총무성) 간 지방행정분야 차관급 협의체

-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23일(토)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이고,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개최되어,
-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,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와 같은 공통 현안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방행정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.

<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개요 >

- (일시/장소) '25. 9. 9.(화) ~ 9. 10.(수) / 일본 도쿄
- (회의 주재) 韓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, 日 총무성 하라 구니아키(原邦彰) 사무차관
- (주요 내용)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합동 정책세미나*, 총무대신 예방 등

* (의제) 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인구정책, ②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, ③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표준화

□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양 국가의 공통 관심과제인 지방소멸대응·지방재정·지역정보화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.

- 첫 번째 의제는 ‘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인구정책’으로, 한국은 생활인구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, 일본은 관계인구와 고향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.
- 두 번째 의제는 ‘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’으로, 한국은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을, 일본은 지방재정계획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재정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.
- 세 번째 의제는 ‘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표준화’로, 인공지능(AI) 정부 시대를 맞아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‘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’과 일본이 역점 추진하는 ‘행정디지털시스템(DX)’에 대하여 상호 사례 발표와 논의를 이어간다.

□ 한편, 9월 10일(수)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무라카미 세이이치로(村上誠一郎) 총무대신을 예방한다.

-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한일 양국 간의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친서를 전달하고, 양국이 지방행정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다.

□ 김민재 차관은 “올해로 25회를 맞는 한·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그동안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양 국가의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가 됨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기여해 왔다”라며,

- “한일 양국은 지방소멸 대응 등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들이 많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. 특히, 일본의 마을·사람·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지방창생정책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지역일자리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커, 향후 국내의 실정에 유효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	책임자	과 장	박성민 (044-205-3101)
		담당자	사무관	조경미 (044-205-3128)

